

전후보상 운동 40개단체 아시아센터안 철회 요구

94.7.18 22:11

일본총리에 긴급요청

【도쿄=김호순 특파원】전후보상 운동을 전개해온 한국과 일본의 40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청소년·여성 교류를 추진하는 아시아센터 등의 설치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보내는 긴급요청서를 발표해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아시아센터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에 전후 50주년을 앞두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

한 여러 미처리문제에 대해 무라야마 내각은 다시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용기와 영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안은 전후처리문제를 얼버무리려는 데 지나지 않아 아시아 각국의 커다란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각 개인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와 보상을 하루빨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요청서는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의 전후책임을 분명히하는 모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 40개 단체의 명의로 발표됐다.